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정상화해야”

전북자치도·민주 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미래 신산업·인프라 확충 위한 협력 방향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헬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 등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새만금이 계획과 논쟁 속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완성되는 공간으로 전환을 위해 재수립중인 기본계획에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강화 추세에 따라 RE100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투자 유치 및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새만금 RE100 선도산업 지정에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새만금 지역에 헬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집적하는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프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규제 특례 적용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

다. 도는 헬프 산업이 바이오·의약 등 연관 산업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국도·국지도 등 전북의 주요 SOC 사업도 다뤘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역설하며, 관련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며, 도민 의료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전북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

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전북 도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 개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법원 개정,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전북의 주요 성과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민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에 재정 지원

‘민주 국회의원 검임’ 김윤덕 국토부장관
올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의 복지를 비롯한 일상에 가장 잘 와닿는 현장 곳곳에 투입된다. 1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과 중화산동, 동완산동 지역 노인복지 및 서민들의 생활을 등 각종 현안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를 사업별로는 △안골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억원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공사 5억원 △수소놀이 체험관 건립사업 3억원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 2억원 등이다. 안골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들의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이다. 완산 청소년센터(문화의집) 보수공사는 식별자제가 함유된 자재를 절감하는 등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특화공간들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쾌적



한 환경공간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수소놀이 체험관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사업으로 완산구 비탈쇠는길 21 일원에 들어선다. 내년엔 완공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부세가 확정될 수 있게 노력한 가운데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보행메트, 벤치, 원주목 계단 등의 정비와 경사지 안정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챙기는 성과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주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업들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의 삶에 가장 잘 와닿는 곳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현장에 반영하겠다”면서 “우리 전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결속을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9억원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3억원 △사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 8억원으로 총 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더불어민주당 전북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포함 국가전략 전환을” | 전북발전연합회, “더 지체할 수 없어”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사무총장 심보균)가 장기 지연 상태에 놓인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로 복합리조트(IR) 유치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임원 30여명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30년이 넘도록 추진돼 온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여전히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세계 최장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공항, 신항만,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에너지 기반 구축 등 핵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은 수차례 ‘동북아 허브’, ‘미래의 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도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대보다 긴 기다림이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측에서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가능성



최한양 회장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임원들이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도박 산업 논쟁이 아니라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관광 기업들이 법 개정 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다만 연합회 최 회장은 “카지노 도입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 방향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산업을 결합한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

금 신항과 크루즈 유치 계획을 거론하며, 복합리조트와 K-콘텐츠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해양테마 산업이 연계될 경우 새만금이 동북아 관광·해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대도시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새만금의 강점으로 꼽았다. 이날 최 회장은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 규명과 국가 컨트롤 타워 기동 △공항·신항·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의 국가 책임 추진 △복합리조트 유치를 포함한 국가전략 수립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핵융합 연구시설 선정과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발전연합회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프로젝트”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현 정부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순창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국토부 지역개발 사례 ‘최우수’

전통 발효문화 활용 산업·관광 융합형... 성과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순창군의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진입도로 건설과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전통 발효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관광 융합형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순창군은 장류를 중심으로 한 전통 발효식품을 핵심 자원으로 삼아 생선·가공·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숙박 시설과 체험형 놀이시설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업, 관광, 체험이 결합된 지역 전통형 특화단지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미생물·발효 분야의 연구 잠재력과 함께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



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이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순창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더해지며, 연간 방문 체험객이 2022년 19만 명에서 올해 약 50만 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게 되며, 2026년도 지역우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류심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받는다. /이만호 기자·순창=이양원 기자

도내 저출생 정책 새 해법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최형열 도의원, 정책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



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흐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각종 현금 지원성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그 중 특히 출생기본수당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쿠팡, 죄 지었으면 책임져야... 김 의장 책임져라”

민주 안호영 의원,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책임 규명 촉구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 안전 논란과 관련해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도망치지 말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직접적인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로 드러난 쿠팡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쿠팡 경영진은 재발 방지보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쿠팡 내부에서 김범석 의장의 법적·사회적 책임이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경영 책임을 우회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보고 체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에너지위원회는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 조직적인 은폐와 책임 회피 의혹에 대해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올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5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5개소가 선정돼 국비 441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1곳, 인정사업 2곳,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2곳이 선정됐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부안군 줄포지구는 ‘쉼과 자연이 스며든, 회복의 정원 도시 웰케이션 in 줄포레스트’를 주제로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노을정원을 테마로 한 지역 특화사업, 기반시설 정비, 거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정사업에는 김제시 금산면과 무주군 안성면이 포함됐다. 김제시 금산면은 주민의 건강과 정서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금산다(多)누리센터를 건립한다. 무주군 안성면은 ‘전마로 여는 백세

건강센터 조성’을 주제로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해 3층규모의 백세건강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판매공간과 창업·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에는 진안군 군하지구와 임실군 이도지구가 선정됐다. 진안군 군하지구는 ‘참 살기 좋은 진안으로 군하라는 비전으로 총사업비 135억원(국비 81억원)을 투입해 노을정원을 테마로 한 지역 주택 정비와 도로·주차장 개선을 추진해 정주 여건을 높인다. 임실군 이도지구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개선’을 주제로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10억원)을 투입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 도로환경개선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차장과 연계한 실내체육시설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